

플랫폼 분쟁 4년 새 4배 급증 입점업체 피해·갈등도 커졌다

공정위, 배달·쇼핑·숙박 분야 조사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 부담 점검
사업자 운영·데이터 정책도 검증
설문·서면조사로 거래 현황 파악
11월까지 조사해 개선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 속에 입점업체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3대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4년 사이 4.3배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애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와 거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기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로 했다. 대상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말 실시된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조사는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 대상 서면실태조사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을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전반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근거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가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및 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종합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폭염·고수온 피해에 농어가 지원 확대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어가 지원 강화
재난지원금 332억원으로 대폭 확대
수산물 300억원 할인 최대 50% 적용

올해 고수온 발생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작년 대비 150%가량 늘어난다. 또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에 대응해 30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지원·최대 50% 할인 등이 실시된다. 농가에는, 폭염에 따른 작물 생육 정상화를 위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폭염·가뭄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개 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양식어류 183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의 강수량이 지난해 대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비 64% 감소한 데다 폭염까지 겹쳐 동·남해역 수온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해수부는, 다만 전체 폐사 물량 가운데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비중은 약 10%에 그쳤으며, 수산물 수급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수온 피해가 확산할 경우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광어·우럭·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

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해 피해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산물 할인 지원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개최해 주요 생선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는 계획인데, 할인 기간도 기존보다 4주 늘릴 예정이다.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3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확대 편성했다. 9월 하순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에서 단감 1125.7헥타르(ha), 벼 572.5ha 등 농작물에 일소와 생육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배추와 무 등 여름 노지채소는 최근 주산지인 강원 평창·강릉·태백에 적정 수준의 비가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직황에 별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무보, 유럽 탄소규제에 400억 금융 뒷받침

삼성물산 독일법인 매출채권 유동화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강화되는 유럽의 탄소규제에 대응해 우리 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 지원 사격에 나선다. 무보는 우리 기업의 유럽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약 400억 원(2500만 유로)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금융이다. 최근 유럽 현지 기업들이 통관 및 규제 대응 부담을 수출 공급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맞서 해외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판매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운전자금 확보가 기업들의 새로운 금융 과제로 부각된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삼성물산 독일법인의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매출채권 매입 후 수출자에게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삼성물산 독일법인은 해당 대금을 즉시 현금화해 운전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지 유동성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기관 역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없애고 위험가중자산을 경감해 BIS 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유럽 탄소규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방식에도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촌 에너지전환 속도 영농형태양광 확산

송 장관 “지역균형·에너지전환 핵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농가 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동 사태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현장 방문을 늘려 왔다.

송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꽃마을에 조성 중인 ‘영농형태양광 선도모델’의 착공 현장을 찾아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을 제도화를 준비하면서 선도모델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과제다.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에너지 전환에 기여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해 많은 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며 “그 결과로 마련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만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는 전력 수요가 많고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 ‘수익의 지역 환원 모델’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시범 지역으로 화성 사꽃마을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업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발전사업과 수익 공유를 주도할 주민참여형 마을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했다. 사꽃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 착공 이후 오는 10월 상업 발전을 개시해 수익 창출에 나선다.

총 1메가와트(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 소득이 창출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상근(왼쪽 2번째)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12일 항만기술개발기업 3개사 대표들과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BPA

부산항만공, 스마트 항만특허 이익공유 추진

중소 기술기업 3곳과 이익분배 계약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소 항만기술 개발기업 3곳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 및 공정한 이익 분배를 도모한다. 공사는 지난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카, 엠비이, 디플러스 3개사와 이익분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 투자, 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방침이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

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다.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 기술 관련 1건이다. 부산항만공사와 3개사는 공동 보유한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허 활용에 따른 수익정산도 기여도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연구개발(R&D) 과정에서의 특허등록, 현장 적용, 사업화, 이익공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의 항만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판로 확대에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병원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지원 강화

노사발전재단, 대한병원협회와 MOU
병원 특성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노사발전재단이 13일 대한병원협회와 ‘병원 업종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간 협약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공동 협약의

후속 조치다.

의료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일터혁신을 목적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병원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병원 업종 대상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공동 홍보 및 참여 확대 ▲병원 맞춤형 교육 및 정책·우수사례 공유 등에 협력하

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서 이달 초부터 의료기관 특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컨설팅을 의료현장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컨설팅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도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업 특화 교육 동영상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